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 도입을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339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4  |
| 1. 총괄적 검토 .....                                  | 4  |
| 2. 조문별 검토 .....                                  | 12 |
| 가. 공유데이터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 12 |
| 나. 데이터의 가명처리(안 제4조의2 신설) .....                   | 14 |
| 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제7조) .....      | 16 |
| 라.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 및 활용(안 제3장 제목 변경 및 제8조·제9조) .... | 21 |
| 마.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신청 및 제공결정 등(안 제10조~제12조) ....  | 27 |
| 바. 데이터 공유 및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안 제13조) .....           | 32 |
| 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안 제18조 ·제21조) .... | 35 |
| 아.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평가(안 제22조) .....                 | 40 |
| 자. 적극행정에 대한 먼책(안 제26조 신설) .....                  | 42 |

##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출연월일 : 2024. 8. 29.

나. 회부연월일 : 2024. 8. 3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데이터의 개념 규정(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

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함.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로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관리 체계 마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1)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 2)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3)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되지 아니한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도록 함.

마.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안 제18조제1항)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에 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관리, 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 및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함.

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1조제2항)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함.

### Ⅲ. 검토의견

#### 1. 총괄적 검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에 제정된 법률임<sup>1)2)</sup>.

동법은 ‘데이터기반행정’을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으로 정의<sup>3)</sup>하고 있는데, 데이터 활용이란 개별 공공기관<sup>4)</sup>만이 아닌 보다 많은 기관이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결국 각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020년 6월 9일에 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음.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행정기관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검토보고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데이터 칸막이를 제거하여<sup>5)</sup> 공공기관 간 데이터 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과 관계됨.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활용을 현행보다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유데이터<sup>6)</sup>’라는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필요성을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 여부가 공공기관의 재량인 반면, 개정안은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며, 현행법은 법에 정해진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 필요성을 판단함에 비해, 개정안은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요청을 받아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난 후 또는 행정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해 각 부처 데이터 칸막이 없앤다”, 2021.5. 참고

6) 개정안 제2조제1호의2 : “공유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를 말한다.

안전부장관이 여러 기관의 공동활용 필요성을 조사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플랫폼을 통해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데이터의 <u>등록</u> 등)</p> <p>•공공기관의 장 : <u>다음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 필요</u>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등록</u>할 수 있음(재량).</p> <p>-주요 정책수립 또는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신속·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p> <p>-특정 계층·지역·분야 등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해 특화된 대책을 마련 또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p> <p>-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p> <p>-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p> <p>-비용절감, 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경제성·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p> | <p>제8조(데이터의 <u>공유</u> 등)</p> <p>•공공기관의 장 : <u>공유데이터</u>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u>구축·관리</u>해야 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연계</u>해야 함(의무).</p> <p>※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을 수 있음.</p> <p>-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p> <p>-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p> <p>•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저장·관리할</p> |

| 현행                                                                                                                                                                                                      | 개정안                                                                                                                                                                                                                                                                                                                                     |
|---------------------------------------------------------------------------------------------------------------------------------------------------------------------------------------------------------|-----------------------------------------------------------------------------------------------------------------------------------------------------------------------------------------------------------------------------------------------------------------------------------------------------------------------------------------|
| <p>◦행안부장관 :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등록</u>할 수 있음.</p> <p>◦행안부장관 :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br/>→ 관련 공공기관에 <u>해당 데이터의 등록</u> 요청<br/>→ 공공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p> | <p>수 있음.</p> <p>◦행안부장관 :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저장·관리</u>할 수 있음.</p> <p>◦행안부장관 :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br/>→ 관련 공공기관에 <u>해당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u>하고, <u>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u>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p> <p>◦정부 : 데이터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p> <p>◦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p> |
| <p><b>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b></p> <p>◦공공기관의 장 : 제8조에 따라 <u>등록된 데이터</u>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u>수집·활용</u>할 수 있음.</p>                                                                                      | <p><b>제9조(공유데이터의 활용)</b></p> <p>◦공공기관의 장 : 제8조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연계된 데이터</u>를 활용할 수 있음.</p> <p>◦공공기관의 장 :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li> <li>-공유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li> </ul>                                         |

##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제공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 개정안                                                                                                                     |
|-------------------------------------------------------------------------------------------------------------------|-------------------------------------------------------------------------------------------------------------------------|
| <p><b>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b></p> <p>◦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등록되지 않은 데이터</u> →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p> | <p><b>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b></p> <p>◦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연계되지 않은 데이터</u> →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p> |
| <p><b>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b></p> <p>◦공공기관의 장 :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p>                                                   | <p><b>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b></p> <p>◦공공기관의 장 :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p>                                                         |

| 현행                                                                                                                                                                                                                                                                                                                                                                                             | 개정안                                                                                                                                                                                                                                                                                                                                                                                    |
|------------------------------------------------------------------------------------------------------------------------------------------------------------------------------------------------------------------------------------------------------------------------------------------------------------------------------------------------------------------------------------------------|----------------------------------------------------------------------------------------------------------------------------------------------------------------------------------------------------------------------------------------------------------------------------------------------------------------------------------------------------------------------------------------|
| <p>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p> <p>※<b>다음 각 호</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술적 분리가 가능할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해야 함.</p> <p><b>&lt;제10조제1항 각 호&gt;</b></p> <p>-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b>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b>)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p> <p>-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p> | <p>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p> <p>※<b>제8조제1항 각 호</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술적 분리가 가능할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해야 함.</p> <p><b>&lt;안 제8조제1항 각 호&gt;</b></p> <p>-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p> <p>-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p> |
| <p><b>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b></p> <p>•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가 <u>제공 예외 사유(제10조제1항 각 호)</u>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 결정</p> <p>•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p> <p>-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 → 지체 없이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p> <p>-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 →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p>                                                                                                     | <p><b>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b></p> <p>•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가 <u>제공 예외 사유(제8조제1항 각 호)</u>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 결정</p> <p>•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p> <p>-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 → 지체 없이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br/>⇒ <u>제공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u></p> <p>-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 →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p>                                        |

개정안은 이 외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기능 강화(안 제18조 및 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평가(안 제22조) 및 보칙 신설(안 제5장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업무의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전반적인 구성체계 및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각 조의 구체적인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문별 검토 참조).

### [현행 및 개정안(정부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개정사항]

| 현행                         | 개정안                        | 주요 개정사항                                                                                                                                                                          |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현행과 같음)                                                                                                                                                                         |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공유데이터’ 정의 신설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일부 신설<br>·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소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편성·집행이 <b>데이터에 기반</b> 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br>-공유 개념 명시<br>·제공, <b>연계</b> 및 공동활용 → <b>공유</b> , 제공 및 활용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단서 신설<br>·제3장의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br>-공유 개념 명시<br>·수집·제공 및 이용 → 수집· <b>공유</b> ·제공 및 이용                                                  |
| <b>&lt;신설&gt;</b>          | 제4조2(데이터의 가명처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로 볼수 있는 요건 신설 → 가명처리의 근거를 동법에 직접 명시                                                                                                                           |
| 제2장 추진 체계                  | 제2장 추진 체계                  |                                                                                                                                                                                  |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 -타 조항의 개정사항 반영<br>-호 신설(운영실태 평가 심의·조정 신설)                                                                                                                                        |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공유 개념 명시<br>· <b>연계</b> · 제공 및 공동활용 → <b>공유</b> · 제공 및 활용                                                                                                                       |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 -공유 개념 명시<br>·데이터 <b>연계</b> · 협력 → 데이터 <b>공유</b> · 협력                                                                                                                            |

| 현행                      | 개정안                          | 주요 개정사항                                                                                                                                                                                                                      |
|-------------------------|------------------------------|------------------------------------------------------------------------------------------------------------------------------------------------------------------------------------------------------------------------------|
|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 제3장 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등           |                                                                                                                                                                                                                              |
|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 제8조(데이터의 공유 등)               | <p>-<b>현행</b>: 공공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음(재량).</p> <p>→<b>개정안</b>: 공유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b>구축·관리해야 함(의무)</b>.</p> <p>※예외: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되어 국익을 해할 우려, 법령에 목적외 이용 금지 명시(현행 데이터 미제공 사유와 동일)</p> |
|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 제9조(공유데이터의 활용)               | <p>-공공기관의 장 :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p> <p>※준수사항: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p>                                                                                                                                                 |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 <p>-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br/>→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요청 가능</p>                                                                                                                                                              |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 <p>-공공기관의 장: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함.</p> <p>※예외: 안 제8조의 예외 사유 인용</p>                                                                                                                                |
|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 <p>-제공요청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제공한 데이터는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함.</p>                                                                                                                                                       |
|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 제13조(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 <p>-<b>현행</b>: 공공기관 간 제공요청 - 제공거부 관련 분쟁<br/>→ <b>개정안</b>: 현행 + <b>행안부장관의 조정 요청 권한</b> 신설(공유데이터 미구축·미관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미연계 시)</p> <p>-<b>현행</b>: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따라야 함<br/>→ <b>개정안</b>: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따라야 함.</p>      |
|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 (현행과 같음)                                                                                                                                                                                                                     |
|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 (현행과 같음)                                                                                                                                                                                                                     |
|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                                                                                                                                                                                                                              |
| 제16조(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 제16조(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 <p>(현행과 같음)</p> <p>※공공기관의 정의에 <b>헌법기관 추가</b><br/>→ 행안부장관이 <b>헌법기관에 대해서도</b>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음.</p>                                                                                                            |
|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 (현행과 같음)                                                                                                                                                                                                                     |
|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 <p>-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추가된 기능)</p> <p>·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b>기술적 조치 및 관리</b></p> <p>·공유데이터의 <b>지장·관리</b></p> <p>·<b>데이터 분석</b>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p>                                                                                    |

| 현 행                         | 개 정 안                         | 주요 개정사항                                                                                                                                                                                                                           |
|-----------------------------|-------------------------------|-----------------------------------------------------------------------------------------------------------------------------------------------------------------------------------------------------------------------------------|
|                             |                               | -공유 개념 명시<br>·연계·제공·공동활용 → <b>공유·제공·활용</b>                                                                                                                                                                                        |
|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 -공유 개념 명시<br>·연계·제공·공동활용 → <b>공유·제공·활용</b>                                                                                                                                                                                        |
|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 -데이터분석센터의 종류(현행)<br>·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행안부장관이 설치·운영)<br>·데이터분석센터(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br>-정부통합분석센터의 기능 중, 여러 기관과 관련된 <b>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b> 에 대하여 <b>전략위원회의 필요 여부 심의 삭제</b><br>※현행: 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분석등 가능 |
|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수행업무 추가<br>·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br>·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br>·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업무 지원<br>-공유 개념 명시<br>·데이터의 <b>등록·제공</b> → 데이터의 <b>공유·제공</b>                                                                     |
|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b>운영실태 평가</b> ) | - <b>현행</b> :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 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br>→ <b>개정안</b> : 행안부장관이 평가, 전략위원회에 보고, 개선이 필요사항 시정요청 등 조치                                                                                                                                 |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 (현행과 같음)                                                                                                                                                                                                                          |
|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 (현행과 같음)                                                                                                                                                                                                                          |
|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5장 보칙                        | 보칙 신설                                                                                                                                                                                                                             |
| <신 설>                       | 제2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br>제3장 및 제20조제3항의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                                                                                    |
| <신 설>                       | 제27조(업무의 위탁)                  |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 2. 조문별 검토

### 가. 공유데이터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p> <p><u>&lt;신설&gt;</u></p> <p>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p> | <p>제2조(정의) -----<br/>-----.</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공유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를 말한다.</u></p> <p>2.·3. (현행과 같음)</p> |

|                                                                                            |  |
|--------------------------------------------------------------------------------------------|--|
|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
|--------------------------------------------------------------------------------------------|--|

개정안은 안 제2조제1호의2에서 ‘공유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공유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개정안에서 ‘공유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데이터 공동활용의 필요성 판단과 데이터의 등록, 수집, 활용을 모두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개정안은 데이터 공동활용을 의무적인 공유데이터 구축·연계·활용 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나. 데이터의 가명처리(안 제4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4조의2(데이터의 가명처리)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2제1항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li> <li>2. 특화된 대책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li> <li>3. 안전사고, 질병 등의 사전 위험 요소와 원인 예측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개발</li> <li>4.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li> </ol> |

개정안은 개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sup>8)</sup>하는 것으로,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sup>9)</sup>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sup>10)</sup>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조항들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도 ‘가명처리 후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뉠 수 있는바, 주요 정책 수립 및 정치·경제·사회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등 개정안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가명처리 후 활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로 간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8. (생 략)

9)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2020.8.5. 시행) 개정이유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제7조)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li> <li>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li> <li>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li> <li>4. 데이터의 <u>연계·제공 및 공동활용</u>에 필요한 체계 구축</li> <li>5. 데이터의 <u>연계·제공 및 공동활용</u></li> </ol> | <p>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공유·제공 및 활용</u>-----<br/>-----</p> <p>5. ----- <u>공유·제공 및 활용</u>-----</p> |

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

-----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
| <p>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p> <p>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p> <p>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p> <p>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p> <p>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u>연계</u>·협력 방안</p> <p><u>&lt;신 설&gt;</u></p> <p>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③ -----<br/>-----.</p> <p>1. ~ 4. (현행과 같음)</p> <p>5. -----<br/><u>공유</u>·협력 ----</p> <p>6. <u>공유데이터의 구축 및 품질·표준 등에 관한 계획</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6조 및 제7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데이터전략위원회<sup>11)</sup>의 심의를 거쳐 확정<sup>12)</sup>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동법 제6조 및 제7조는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각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사항들 중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을 “데이터의

---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⑤ (생략)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⑦ (생략)

1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생략)

공유·제공 및 활용”으로, “데이터 연계·협력”을 “공유·협력”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이 ‘공유데이터’ 개념 도입을 통해, 현재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동활용(재량)’에서 ‘공유를 통한 활용(의무)’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데이터의 구축 및 품질·표준 등에 관한 계획’을 추가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 데이터 공유 체계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음.

라.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 및 활용(안 제3장 제목 변경 및 제8조·제9조)

| 현행                                                                                                                                                     | 개정안                                                                                                               |
|--------------------------------------------------------------------------------------------------------------------------------------------------------|-------------------------------------------------------------------------------------------------------------------|
|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 제3장 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등                                                                                                |
|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데이터의 공유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데이터를 구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령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
|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 3. 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
|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공유데이터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

죽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라 한다)에 연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연계 등 데이터의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데이터의 구축

|                                                                                                                                                                                        |                                                                                                                                                                                                                                                                                                                                                                                               |
|----------------------------------------------------------------------------------------------------------------------------------------------------------------------------------------|-----------------------------------------------------------------------------------------------------------------------------------------------------------------------------------------------------------------------------------------------------------------------------------------------------------------------------------------------------------------------------------------------|
| <p>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② 제1항에 따른 <u>데이터의 수집 방법</u>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 관리를 위한 절차 및 공유데이터의 연계·가공·결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공유데이터의 활용) ① -----</p> <p>-----</p> <p>--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p> <p>---.</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공유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p> <p>2. 공유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p> <p>③ ----- 공유데이터의 -----</p> <p>-----</p> <p>-----.</p> |
|----------------------------------------------------------------------------------------------------------------------------------------------------------------------------------------|-----------------------------------------------------------------------------------------------------------------------------------------------------------------------------------------------------------------------------------------------------------------------------------------------------------------------------------------------------------------------------------------------|

현행 제3장은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장으로, 제8조·제9조는 공동활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의 등록 및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관한 내용이고, 제10조~제13조는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제공 요청과 제공 범위 및 절차 그리고 데이터 제공 요청이 거부되었을 경우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우선 제3장의 제목을 현행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에서 ‘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등’으로 개정하고, 제8조 및 제9조에서도 제목 중 ‘등록’, ‘수집’이라는 용어를 ‘공유’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데이터의 공동활용 필요성을 판단하여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동활용하는 체계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안 제8조 및 제9조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필요성을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 여부가 공공기관의 재량인 반면, 개정안은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법에 정해진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 필요성을 판단함에 비해, 개정안은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 개정안                                                                                                                                                                                                                                                                                                                                                                                                                                                                                       |
|------------------------------------------------------------------------------------------------------------------------------------------------------------------------------------------------------------------------------------------------------------------------------------------------------------------------------------------------------------------------------------------------------------------------------------------------------------------------------------------------------------|-------------------------------------------------------------------------------------------------------------------------------------------------------------------------------------------------------------------------------------------------------------------------------------------------------------------------------------------------------------------------------------------------------------------------------------------------------------------------------------------|
| <p><b>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b></p> <p>•공공기관의 장 : <u>다음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 필요</u>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등록</u>할 수 있음(재량).</p> <p>-주요 정책수립 또는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신속·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p> <p>-특정 계층·지역·분야 등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해 특화된 대책을 마련 또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p> <p>-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p> <p>-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p> <p>-비용절감, 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경제성·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p> <p>•행안부장관 :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p> | <p><b>제8조(데이터의 공유 등)</b></p> <p>•공공기관의 장 : 공유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u>구축·관리</u>해야 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연계</u>해야 함(의무).</p> <p>※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을 수 있음.</p> <p>-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p> <p>-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p> <p>•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저장·관리할 수 있음.</p> <p>•행안부장관 :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p> |

|                                                                                                                                                                      |                                                                                                                                                                                                                                                                                                               |
|----------------------------------------------------------------------------------------------------------------------------------------------------------------------|---------------------------------------------------------------------------------------------------------------------------------------------------------------------------------------------------------------------------------------------------------------------------------------------------------------|
| <p>합관리 플랫폼에 <u>등록</u>할 수 있음.</p> <p>◦<b>행안부장관</b> :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p> <p>→ 관련 공공기관에 <u>해당 데이터의 등록</u> 요청</p> <p>→ 공공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p> | <p>합관리 플랫폼에 <u>저장·관리</u>할 수 있음.</p> <p>◦<b>행안부장관</b> :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p> <p>→ 관련 공공기관에 <u>해당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u>하고, <u>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u>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p> <p>◦<b>정부</b> : 데이터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p> <p>◦<b>공공기관의 장</b> :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p>            |
| <p><b>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b></p> <p>◦<b>공공기관의 장</b> : 제8조에 따라 <u>등록된 데이터</u>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u>수집·활용</u>할 수 있음.</p>                                            | <p><b>제9조(공유데이터의 활용)</b></p> <p>◦<b>공공기관의 장</b> : 제8조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연계된 데이터</u>를 활용할 수 있음.</p> <p>◦<b>공공기관의 장</b> :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li> <li>-공유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li> </ul> |

마.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신청 및 제공결정 등(안 제10조~제12조)

| 현행                                                                                                                                                                                                                                                                                                                                                                                                                                        | 개정안                                                                                                                                                                                                                                   |
|-------------------------------------------------------------------------------------------------------------------------------------------------------------------------------------------------------------------------------------------------------------------------------------------------------------------------------------------------------------------------------------------------------------------------------------------|---------------------------------------------------------------------------------------------------------------------------------------------------------------------------------------------------------------------------------------|
| <p>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p>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연계되지 아니한 -----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br/>-----<br/>-----<br/>-----<br/>-----<br/>----- 제8조 제1항 각 호-----<br/>-----<br/>-----.</p> |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② -----  
----- 제8조제1항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의 제공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① -----  
-----  
----- 제8조제1항 -----  
-----  
-----  
--.

|                                                                                                                                                                                                                                                                                                                                |                                                                                                                                                                                                                   |
|--------------------------------------------------------------------------------------------------------------------------------------------------------------------------------------------------------------------------------------------------------------------------------------------------------------------------------|-------------------------------------------------------------------------------------------------------------------------------------------------------------------------------------------------------------------|
| <p>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p>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대상·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② -----<br/>-----<br/>-----<br/>-----<br/>-----<br/>-----<br/>-----<br/>-----<br/>-----</p> <p>--. 이 경우 제공한 데이터는 <u>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여야 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개정안 제10조~제12조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지 않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안 제10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예외 사유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1조).

또한 제공 요청에 따른 검토를 거쳐 타 공공기관에 제공한 데이터는 그 이후부터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도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기존에 연계되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단 제공한 다음부터는 추후 동일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제공을 요청하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공유데이터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제공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br>•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등록되지 않은 데이터</u> →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br>•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u>연계되지 않은 데이터</u> →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

|                                                                                                                                                                                                                                                                                                                                                                                                      |                                                                                                                                                                                                                                                                                                                                                                                                                                |
|------------------------------------------------------------------------------------------------------------------------------------------------------------------------------------------------------------------------------------------------------------------------------------------------------------------------------------------------------------------------------------------------------|--------------------------------------------------------------------------------------------------------------------------------------------------------------------------------------------------------------------------------------------------------------------------------------------------------------------------------------------------------------------------------------------------------------------------------|
| <p>•<b>공공기관의 장</b> :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p> <p>※<b>다음 각 호</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술적 분리가 가능할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해야 함.</p> <p>-다른 <b>법률</b>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b>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b>)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p> <p>-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p> | <p>•<b>공공기관의 장</b> :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p> <p>※<b>제8조제1항 각 호</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술적 분리가 가능할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해야 함.</p> <p>&lt;안 제8조제1항 각 호&gt;</p> <p>-다른 <b>법률</b>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b>대통령령 및 조례</b>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p> <p>-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p> |
| <p>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p> <p>•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가 <b>제공 예외 사유(제10조제1항 각 호)</b>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 결정</p> <p>•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p> <p>-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 → 지체 없이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p> <p>-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 →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p>                                                                                                                  | <p>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p> <p>•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데이터가 <b>제공 예외 사유(제8조제1항 각 호)</b>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 결정</p> <p>•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p> <p>-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 → 지체 없이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br/>⇒ <b>제공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b></p> <p>-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 →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p>                                                                                       |

바. 데이터 공유 및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안 제13조)

| 현행                                                                                                                                                                                                                                                                                                     | 개정안                                                                                                                                                                                                                                                                                                                                                                                                                             |
|--------------------------------------------------------------------------------------------------------------------------------------------------------------------------------------------------------------------------------------------------------------------------------------------------------|---------------------------------------------------------------------------------------------------------------------------------------------------------------------------------------------------------------------------------------------------------------------------------------------------------------------------------------------------------------------------------------------------------------------------------|
| <p>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13조(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구축·관리하는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현행 제13조는 공공기관이 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였다가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sup>13)</sup>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에 따른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함<sup>14)</sup>.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함.

개정안은 현행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외에 데이터의 ‘공유’

---

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락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⑨ (생략)

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거부에 대한 조정을 신설(조 제목도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타 공공기관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외에,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지 않거나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이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와 관련된 조정 및 이행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정 결과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음.

#### [데이터 공유 및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비교]

| 현행                                                                                                                                                                                                           | 개정안                                                                                                                                                                                                                                                                                                                      |
|--------------------------------------------------------------------------------------------------------------------------------------------------------------------------------------------------------------|--------------------------------------------------------------------------------------------------------------------------------------------------------------------------------------------------------------------------------------------------------------------------------------------------------------------------|
| <p>제13조(데이터의 <u>제공</u> 거부에 대한 요청)</p> <p><u>&lt;신설&gt;</u></p> <p>◦공공기관의 장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 가능</p> <p>-다른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p> <p>◦<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함.</p> | <p>제13조(데이터의 <u>공유</u> 및 <u>제공</u> 거부에 대한 조정)</p> <p>◦<u>행안부장관</u> : 다음의 경우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 가능</p> <p>-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지 않는 경우</p> <p>-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않는 경우</p> <p>◦공공기관의 장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 가능</p> <p>-다른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p> <p>◦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함.</p> |

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안 제18조·제21조)

| 현행                                                                                                                                                                                                                                                                                                                                                                                                                                                                                                                                                      | 개정안                                                                                                                                                                                                                                                                                                                                                                                                               |
|---------------------------------------------------------------------------------------------------------------------------------------------------------------------------------------------------------------------------------------------------------------------------------------------------------------------------------------------------------------------------------------------------------------------------------------------------------------------------------------------------------------------------------------------------------|-------------------------------------------------------------------------------------------------------------------------------------------------------------------------------------------------------------------------------------------------------------------------------------------------------------------------------------------------------------------------------------------------------------------|
| <p>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u>제공·연계</u> 및 <u>공동활용</u>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li> <li>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li> <li>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li> <li>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li> <li>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u>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u></li> </o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그 밖에 데이터의 <u>제공·연계</u> 및 <u>공동활용</u>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p> | <p>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p> <p>-----</p> <p>----- <u>공유·제공</u> 및 <u>활용</u>-----</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li>5. 제8조제2항에 따른 <u>공유데이터의 연계</u>에 관한 기술적 조치 및 관리</li> <li>6.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u>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u></li> <li>7.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u>제공</u></li> <li>8. ----- <u>공유·제공</u> 및 <u>활용</u>-----</li> </ol>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

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등 지원

<신 설>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

<신 설>

4.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등록·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신 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

행 지원

5. 제8조제7항에 따른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
6. -----  
----- 공유·제공 -----  
-----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9. (현행 제6호와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
| <p>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현행법 제1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대한 사항이며, 제21조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된 규정임.

개정안은 제18조 및 제21조의 조문 중 데이터의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을 “공유·제공 및 활용”으로, “등록·제공”을 “공유·제공”으로 수정하고, ‘수집’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의 ‘공유’, ‘공유데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동 활용(재량)’에서 ‘공유를 통한 활용(의무)’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외 개정사항으로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으로 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 및 관리, 공유데이터의 가공·결합·저장·관리 및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신설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업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활용 체계의 정착을 위해 데이터통합 관리 플랫폼과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아.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평가(안 제22조)

| 현행                                                                                                                                                                                                                                                                                                                             | 개정안                                                                                                                                                                                                                                                                                                                                                                                                                                                        |
|--------------------------------------------------------------------------------------------------------------------------------------------------------------------------------------------------------------------------------------------------------------------------------------------------------------------------------|------------------------------------------------------------------------------------------------------------------------------------------------------------------------------------------------------------------------------------------------------------------------------------------------------------------------------------------------------------------------------------------------------------------------------------------------------------|
| <p>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b>실태</b>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 <p>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b>운영실태</b>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공유·제공 및 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22조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직원 등에 대하여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평가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먼저 현행 조 제목에서 ‘점검’을 삭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 수행방식도 현행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접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또한 평가 후의 조치와 관련해서도 현행 우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 지급 외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등 조치를 규정하였는데,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는 공공기관 간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 및 활용 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실태 평가와 사후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26조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2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제3장 및 제20조제3항의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안 제26조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제3장(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등) 및 제20조<sup>15)</sup>제3항(정부통합

-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필요한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력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한 데이터 제공)의 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 데이터 공유 및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공유데이터 구축·연계와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센터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sup>16)</sup>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sup>17)</sup>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sup>18)</sup> 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339

1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생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